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March 13 2023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영국: BEPS 문서화 규정 도입 관련 법률 초안 발표 및 관련 SAT 서식 도입 연기

영국 정부는 새로운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법률 초안(The Transfer Pricing Records Regulations 2023)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률 초안에 따르면 연결 매출액이 7 억 5 천만 유로 이상이고, 영국에서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MNE)은 2023 년 4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OECD 이전가격 지침서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및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를 작성 및 구비하고, 향후 과세당국 요청 시 30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번 발표된 법률 초안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특허 박스(Patent Box, IP 매출 및 로열티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에 해당되거나 링 펜스 거래(Ring fence trade, 금융회사에 대해 예금취급 및 투자은행 업무를 분리하는 제도)를 수행하지 않는 이상 영국 내 기업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당초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와 함께 도입 예정이었던 SAT 서식(Summary Audit Trail, 개별기업보고서 작성 시 합리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설문지 형태의 서식)은 향후 의견수렴 절차 이후 도입하는 것으로 연기되어 다수의 납세의무자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SAT 서식은 OECD 이전가격 지침서와 달리 영국 고유의 추가 문서로 영국 정부에서 이전가격문서화 규정 도입 논의 당시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와 함께 개별기업보고서 작성에 있어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하기로 고려하였던 서식이며, SAT 서식의 상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두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업들이 이전가격정책을 준수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수행하고
- 영국 과세당국(HMRC)으로 하여금 높은 수준으로 작성된 이전가격 보고서를 수취하고 위험이 높은 부분에 초점을 두어 검토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발표된 법률 초안에는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만 존재하며, SAT 요건은 영국 과세당국(HMRC)의 고시를 통해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영국 과세당국은 2023년 1월 31일까지 SAT에 대한 별도의 공개 협의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며, 협의에 따라 SAT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SAT 시행과 이전가격 문서화 요건이 동시에 발효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HMRC는 납세자에게 과도한 이행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영국 과세당국이 신뢰 가능하고 적시성 있는 이전가격 문서화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SAT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향후 SAT 도입 시 이전가격 문서화 분석에 사용된 근거 정보가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최신정보가 아닌 경우 HMRC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더 나아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영국 다국적 그룹 구성원은 이전가격문서의 내용이 정확하고, 최신의 이용가능한 근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18 전 3997, 2023.01.09

쟁점이자를 금융비용으로 보더라도 그 이자율은 통상적인 이자율보다 높아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이자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상이자율로 거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이 사건 각 사업연도별로 쟁점차입금의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1) 사실관계 및 불복경위

- 청구법인은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집단(이하 "AAA")과 한국의 000그룹이 공동 투자한 외투법인으로 양 그룹 간의 협약 (이하 "쟁점협약")에 따라 000그룹이 AAA에 주식교환거래를 제안하였으나, AAA의 요구로 청구법인은 AAA 주식소각거래(이하 "쟁

점거래”)를 하였는데, 이 때 대금은 ○○○그룹○○○(이하“BBB”)로부터 차입을 하여 AAA 주식을 소각하였음. 청구법인은 BBB가 청구법인의 완전모회사(100%)이자 동시에 채권자가 된 다음, 2014~2015사업연도에 BBB에 지급한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식하였음

-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목적과 실질이 AAA와 ○○○그룹 간의 주식교환이므로 청구법인이 자기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우회적·변칙적 차입거래를 일으켜 이자비용을 지급함에 따라 부당한 조세회피가 발생하였는 바, 2014~2015사업연도분 쟁점이자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고지하는 한편, 쟁점이자의 귀속자를 ○○○가 아닌 ○○○으로 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음. 한편, 2016~2018사업연도분 쟁점이자의 경우 청구법인이 손금부인으로 신고한 다음 다시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음
-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에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와 다를 것이 없어 그 자체로 손금일 뿐이라며 업무무관지출 등 손금부인 대상이 아니라면서, 처분청이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려면 조세회피의도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나, 자의적 추정에 기한 거래의 재구성만 존재할 뿐, 조세회피의도라는 본질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조세심판원 판단

- 법인세법 및 상법은 법인이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자금에 대하여 법률적·경제적·회계적 차이 등에 기초하여 자본(증자)과 부채(차입)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고, 쟁점차입금이 차입의 방법으로 조달한 부채에 해당하는 이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회사라는 이유로 부채(쟁점차입금)가 자본으로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제시한 실질에 따라 취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쟁점차입금은 100% 모회사로부터 조달한 것이어서 그 실질은 자본과 같다) 또한,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취지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조세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탄력적으로 해석하여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대법원 2012.1.19. 선고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이라는 점과 법인세법령이 “차입금이자”를 손비에 포함된다고 명문으로 직접 규정한 반면, 달리 채권자의 지위(채무자에 대한 지분소유 등)에 따라 차입금이자를 손비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등 별도의 특례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결국 쟁점 차입금의 채권자가 청구법인의 모회사라 하더라도, 쟁점차입금 자체가 부채에 해당하는 한, 그 부채에서 발생한 쟁점이자에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차입금이자로서 손비에 포함된다고 봄이 합당함
- 다만, 쟁점이자를 차입금이자로 보더라도 국조법 제4조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쟁점이자에 적용된 이자 8%는 통상적인 이자율 보다 높아 보이고, 청구법인 또한 쟁점이자에 부채(쟁점차입금)를 조달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손비에 포함되는 차입금이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면서도, 정상이자율로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이 사건 각 사업연도별로 쟁점차입금의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03 관세

인도: 통상무역부 장관, 현대기아차의 무차별 FTA로 인도의 막대한 무역적자 주장

1) 개요

- 인도 통상무역부 장관 피유시 고얄은 2023년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 진행된 아시아경제대화(Asia Economic Dialogue, AED)에서 현대기아 등 한국 자동차 대기업들의 FTA를 통한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도는 수십억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힘.

2) 주요 내용

- 피유시 고얄 장관은 한국 자동차 기업, 특히 현대기아는 한국-인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혜택을 누려왔으며, 이를 통해 계속해서 무차별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이로 인해 인도는 막대한 무역적자를 입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공식석상에서 발표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고 밝힘.
- 고얄 장관은 인도와 한국은 현재 시장 개방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한국 기업들의 강력한 민족주의 정신으로 인한 국내기업 선호 현상으로 인해 여전히 한국 시장에서 더 높은 비용을 들여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현재 인도기업들이 마주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언급하였음.
- 그는 "한국 정부는 인도의 한국에 대한 철강 수출을 중단하지는 않으나, 한국의 강한 민족주의 정신 때문에 철강을 단 1톤도 팔 수 없다"고 말함.
-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인도 기업들이 "경쟁력있고 독립적이며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Production-linked incentive scheme, "PLI")^{*}만이 제조업 부문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 제조업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조 기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제조업 육성과 해외 투자 유입을 목표로 하는 정책.

[KPMG 의견]

인도 통상무역부 장관의 무역적자 발표에 따라 자동차 산업 중심의 한국-인도 FTA 적용 대상 품목에 대한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자동차 산업의 완성차 및 부품사의 인도법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자체 진단을 필요하다고 사료됨

-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품목분류 및 원산지 등 수출입 Compliance 사전 점검
- 현재 인도 관세정보국(DRI)은 완성차는 물론이고,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수입 물품(부품 등)의 HS CODE 적합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대 5년간의 수입대상에 대한 세액 추징을 시도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 수출 및 인도 수입 시,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는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 의 적합성 및 한국-인도 FTA 원산지 충족에 대한 소명 가능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여, 인도 과세당국의 조사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 02-2112-7542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